

언론보도 점검 협조 요청

(‘08.3.18 화, 대변인실)

□ 요청 배경

- 최근 BH 관련 언론보도가 내부의 정보관리 허술 및 부적절한 기자의 취재응대에서 초래, BH發 부정적 보도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통령실 내부의 보도확인 및 점검, 정보보안 및 기자 취재응대 원칙 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청 드립니다.

□ 보도확인 및 점검

- 대변인실에서 수시로 확인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 팩트와 보도경위는 각수석실과의 긴밀한 정보공유가 절실합니다.
 - ※ 대변인실 보도점검 : 조간 06:00~07:30, 석간 13:00~13:30, 가판 19:00~19:30, 방송 수시, 인터넷 수시
- 대변인실의 보도점검과 동일시간에 수석실에서도 관련보도를 점검하고, 팩트와 보도경위 확인에 대해 정보공유가 필요합니다.
 - 각수석실별로 보도점검과 대변인실과의 긴급한 연락을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수시 연락 가능한 비상통신망 가동을 요청드립니다.
 - 특히, 인터넷은 속보성과 과급력을 고려할 때, 상시적인 보도점검 및 팩트점검이 중요합니다.
 - ※ 각수석실 보도점검 담당자 지정 대변인실 통보(3.20까지, 언론1비서관실 김길성 행정관)
- 언론으로부터 취재요청·질의·팩트 확인 요청 등을 받았을 경우 사전 및 사후에 걸쳐 언론1비서관실(내선 7821,7823 또는 이지원)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또한, 컴퓨터 보안관리와 정보보안에 유의하고, 적절한 취재응대를 통해 부정적 보도 및 정제되지 않은 보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보도 리스트 (5.31/오후)

※ TOP <14 · 15 · 16시> D-2 접전지 당력 총동원

- VIP, “정부의 중도실용 기조 흔들려서는 안 돼” (14시 6번째 단신) - VIP, 수석비서관회의 주제
- VIP, “국제사회에 원칙·비전 제시하면서도 국정운영과정에서 중도실용정책이 확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야”
- ※<mbn> VIP, 내달 4일 싱가포르 방문 (15시 5, 16시 4번째 단신) - VIP, 6월 4일 상그릴라 대회 개막 기조연설
- 靑, “VIP, 천안함 사태 관련 한반도·동북아 평화구도 정착 위한 정책 설명하고 아시아 등 국제사회 협력 요청할 계획”
- D-2 접전지 당력 총동원 (14·15·16시 톱 상보) - 한나라·민주 지도부, 강원·충청 총출돌 전력 유세
- 與 김무성 대표, 경남 전역 유세··이달근 후보 지지 호소 / 민주당 박지원 대표, 경기 일원·서울 접전지 등 유세 지원
- 하토야마, 中 총리에 대북 제재 협력 요청 (14시 5, 16시 8번째) - 방일 중인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
- 참여연대·민변,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 청구” (14시 7번째 단신) - TOD 동영상 등 12가지 자료 청구
- 北, “개성공단 지속·등록살비 반출 불허” (15시 7, 16시 6번째 단신) - “반드시 개성공단 내 北 세무서 경유”
- ※<돌발영상> - ‘의원 vs 장관 (5월 24일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 - 野 의원들 의혹 제기엔 단호히 맞받아 치는 김 국방 부차

YTN 뉴스&이슈 1부 - 14시뉴스	YTN 뉴스&이슈 2부- 15시뉴스	YTN 뉴스&이슈 3부 - 16시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 관련 (4꼭지) 1) D-2 접전지 당력 총동원 2) 경남교육감 후보에게 듣는다 3)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에게 듣는다 4) 경찰, 투표일 갑호비상...총력 경비 ○ 천안함 사태 관련 (3꼭지) 5) 하토야마, 중국 총리에 대북 제재 협력 요청 6) (VIP) “정부의 중도실용 기조 흔들려서는 안 돼” 7) 참여연대·민변, “천안함 관련 정보 공개 청구” 8) 산업생산 10개월째 증가 9) 고춧가루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절반이 가짜 10) 후두암 증가 '90%가 흡연' 11) 멕시코 마약조직 살해 추정 시신 무더기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 관련 (3꼭지) 1) D-2 접전지 당력 총동원 2) 서울시장 후보의 하루 3) 최대 승부처 '경기지사 후보' 4) “10% 미만 득표자 총선비용 보전 제한 합헌” ○ 천안함 사태 관련 (4꼭지) 5) 러시아 전문가팀 방한 '천안함 조사' 6) “北, 탈북 막기 위해 모든 가구 조사” 7) 北 “개성공단 지속·등록살비 반출 불허” 8) 하토야마, 中 총리에 대북 제재 협력 요청 9) 월드컵 최종엔트리, 내일 오후 발표 10) '용산참사' 농성자 9명 향소심에 서도 중형 11) 감사원, 일부 부처 엉터리 성과 지표 적발 12) '국제 경호책임자 협회 서울 총회' 개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 관련 (2꼭지) 1) D-2 접전지 총동원 '표심잡기' 2) 전북지사 선거...민주당 강세 ○ 천안함 사태 관련 (4꼭지) 3) 러시아 전문가팀 오늘 방한...천안함 조사 검토 4) 천영우 외교차관 방미...‘천안함’ 등 현안 논의 5) (외교부) “중국과의 협의는 진행형” 6) 北 “개성공단 지속·등록살비 반출 불허” 7) 산업생산 10개월째 증가 8) 올해와 내년 한국 잠재 성장률 OECD 최고 9) 후두암 증가 '90%가 흡연' 10) 고춧가루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절반이 가짜 11) '용산참사' 농성자 9명 향소심에서도 중형 12) 경찰, '남한 선제공격설' 인터넷 유포 수사

매체	문제 내용	조치결과
YTN	※ 외신들 “(中) 지지 신호 안 보여” (9시 상세 보도) - 3국 정상회담 관련 AFP·AP·BBC·NHK의 부정적 반응 보도	<div style="font-size: 2em; color: green; margin: 0 auto;">➔</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10시 뉴스 이후부터 해당 기사 비보도</p>
mbn	※ 외신 “韓·日, 中 설득 실패” (9시 단신 보도) - 3국 정상회담 관련 AFP·AP·BBC·로이터의 부정적 반응 보도	

MBC 뉴스데스크 보도 분석

[11.26 ~ 12.10]

- **‘4대강 정비사업 14조 투입(11.26)’을 기점으로 ‘대운하 재추진’ 의혹을 집중 제기해온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 TV3사 중 가장 먼저 이슈화, KBS·SBS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도량 많음
 - * 별도꼭지로 자세히 분석하거나 유관이슈 보도 중 간접 언급 방식으로 2주간 10여차례 거론. (<KBS> 2차례, <SBS> 1차례 보도와 대비)
 -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이 잇달아 4대강 정비사업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한 것에 주목, 야권의 ‘대운하 우회상장’ 시각에 무게
 - **대통령 관련, 단순 동정은 보도하지 않거나 축소한 반면**
 - ‘주식발언’ ‘재산환원’ 등 논란 이슈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명하고 앵커 클로징 등을 통해 거듭 비판 시도
 -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상득 의원 등 대통령 측근 관련 뉴스도 타사에 비해 민감하게 다루는 경향
 - **경제정책과 경제팀에 대해 ‘불신’ 시각 표출**
 - 특히 앵커 클로징에서 종종 현 경제팀에 대한 불만 노골화
 - **기타, △방송법 개정안 △‘이념편향’ 교과서 논란 등에 대해 정부 비판적 입장에서 관심 지속**
- ※ 최근 3TV메인뉴스 시청률 KBS(20~30%)-SBS(7~10%)-MBC(6~8%)順, 11월 들어 MBC뉴스가 SBS뉴스에 뒤쳐지는 3순위 고착화 참조

※ 문제보도 사례 별첨(4-5페이지)

■ 현안별 보도내용

□ 4대강 정비사업 관련

- 청와대와 정부가 사실상 대운하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방송 3社 중 가장 먼저 이슈화하고 연일 문제적 시각에서 보도
 - 4대강 정비사업 14조 투입을 “대운하 공사비?”(11.26) 제목으로 보도한 이후 “하천정비 강력 추진…대운하 연결되나?”(12.1), “대운하 논란 증폭”(12.10) 등 계속 쟁점화
 - 또한 이헌재 전 부총리 발언 중 “토목공사 등 SOC 투자 신중할 것”(11.28) 부각하고, “말로만 녹색성장?(12.6)” “건설투자 효과 논란(12.9)” 등 기획보도 방식으로 4대강 정비사업 간접 비판
- 특히,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운하 재추진說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
 - <12.10> 부국환경포럼의 발족 주체들이 박승환·이재오 전 의원 등 대통령 직계인사라고 꼬집고 ‘대운하 부활’에 무게
 - 대통령의 “국익 위해서라면 4대강 사업 추진해야” 언급 등을 전하며 핵심 부서에서부터 대운하 재추진 조성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 ※ 11.27일 <KBS>가 정치권 논란을 한 차례 조명하긴 했지만, 이후 12.10일 까지 관련보도 尠無. 야권이 본격 문제제기한 12.10일에만 3社 모두 보도

□ 대통령 관련

- 대통령과 청와대가 경제난국 극복이나 강력한 국정운영 의지를 드러낸 경우엔 논평 없이 fact만 보도하거나 보도
 - <11.27> 대통령 당 지도부 회동 관련, KBS·SBS는 “목숨걸고 노력해야” 등 제목으로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긍정 조명한 반면, MBC는 대통령의 예산안 처리 당부로 여야 극한대치가 우려된다는 내용에만 포커스
 - <12.5> ‘청와대 부처 업무보고 이달부터 시작’ 보도(SBS는 경제 활성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하고 상세보도, KBS는 청와대 계획 위주로 전달)
- 논란이슈에 대해서는 앵커 클로징 등으로 재차 문제제기 하거나 부정적 인터뷰를 부각해 우회적 비판

- <12.4> 민생현장 답방 관련, KBS·SBS는 대통령이 체감경기 어려움을 절감하는 표정이었다고 해석한 반면 MBC는 “기대-냉소 교차” 등 보도 시각차
- <11.26> 대통령 주식발언 논란 관련 클로징, “...조선·중앙도 사실로 비판”

○ 대통령 측근 관련 보도도 타사에 비해 민감하게 보도

- <12.5> 이재오 전 최고위원 정계복귀 시사를 관심 있게 전하고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說’ 주목
- <12.6> 이상득 의원 ‘성향보고서’ 파문 관련, KBS는 단신보도 · SBS는 fact 위주로 보도한데 반해 MBC는 민주당 성명과 함께 대통령 형임을 강조하며 ‘상왕정치’ 논란 불가피 전망

□ 경제 관련

○ 정부 경제팀과 경제정책 관련 앵커 클로징 등에서 ‘불신’ 시각 표출

- <12.1> “...우리 경제팀은 이미 초라한 성적표...제2의 미네르바 · 이현재 전 부총리 등이 주목받는 상황”, <12.5> “물류창고 화재처럼 강만수 장관 무리한 발언 시리즈 등도 고쳐지지 않고 되풀이” 등 비판적 클로징이 눈에 띄
- <12.4> “정부 구조조정 계획 ‘오락가락’...불신만 키워”

□ 기타

○ 방통위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11.26일 의결 때부터 이슈화

- “방송 소유기준 10조원 적절인가(11.26)” “대기업 소유 허용·반발(12.3)” “재벌에 방송사 허용?(12.5)” 등 제하, 상대적으로 여러 차례 문제제기

○ 근현대사 교과서 출판사들이 정부의 ‘이념편향 수정’ 지시를 수용한 데 대해(11.29)

- TV3사 중 유일하게 ‘정부가 수정 안 하면 교과서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카드를 흘린 가운데 나온 입장’이라며 ‘반 강압’에 의한 결정이라는 뉘앙스로 보도

■ [별첨] 문제보도 사례

일시	제목	내용
4대강 정비사업 관련		
11.26	대운하 공사비? (7번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부의 4대강 정비사업 14조 투입에 대해 사업비·사업기간 등이 대운하 계획과 거의 일치한다며 의혹 제기
11.28	“극약처방 필요” (19번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강연회 발언 전하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목공사 같은 SOC 투자는 신중히 결정할 것’을 지적했다는 내용을 3사중 유일하게 부각보도 앵커클로징서 “어려울 때 생각나는 관리 1순위가 3년만에 입을 열었다”며 이 전 부총리 조언에 힘 실어주는 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식과 경험이 어우러진 오바마 첫 내각 생각을 지을 수 없다”며 오바마 내각과 우리 내각을 비판적 대조
11.28	좋은 일자리 부족 (22번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대책도 ‘건설현장 비정규직’에 집중돼 있다고 비판
11.29	재정적자 괜찮나? (14번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헌재 전 부총리 언급을 옹호하는 학자들 견해 연일 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감세·건설투자 집중’을 지목하며 신중 재차 당부
12.1	하천정비 강력추진/ 대운하 연결되나? (12-13번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운하 공약 때의 논리와 비슷하고 추진하는 사람도 동일하다며 ‘대운하 부활’ 가능성에 무게
12.6	말로만 녹색성장? (17번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가 녹색성장 목표와 달리 성장·개발 위주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그 예로 ‘대운하’ ‘수도권 규제완화’ 등 열거
12.7	“공공투자” “줄여라” (13번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안 세출심사 관련, 3사중 유일하게 ‘대운하 의심 예산 삭감’ 쟁점화를 예상하며 또 한 번 ‘대운하’ 이슈 부각
12.9	건설투자 효과 논란 (4번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SOC 투자 계획에 대해 ‘재정낭비’ ‘선진국 대비 과잉투자 경향’ 등 문제적 시각에서 조명
12.10	대운하 논란 증폭/ 4대강 예산 통과 (7-8번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KBS/SBS>는 청-야권 공방을 팩트 위주로 보도한 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MBC>는 두 꼭지에 걸쳐 논란을 집중 보도하고 논란의 책임을 청와대에 돌리는 논조로 보도 부국환경포럼 발족 주체들이 대통령 직계인사임에 주목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박병원 수석이 “운하면 어떨고 4대강이면 어떨냐” 등 운하 추진 여지를 시사해 왔으며 핵심부부터 조성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
대통령 · 청와대 관련		
11.26	앵커클로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주식발언’ 논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와대가 이미 카메라에 찍힌 발언을 없애려 애쓴 대목이 안타깝다면서 조선·중앙도 사실 통해 비판했다고 언급

11.27	예산안 여야 대치 (14번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의 당 지도부 회동 관련, - <KBS/SBS>는 “목숨걸고 노력해야” 등 제하로 대통령이 경제난 극복 총력을 당부했다고 상세히 전하고 ‘난국타개 위해 국정운영 다잡기 의도’ 등 긍정적으로 풀이한 반면, - <MBC>는 대통령의 예산안 처리 당부로 여야 극한대치가 우려된다는 내용만 보도하고 민주당 입장 전달
12.4	눈물로 하소연 (11번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가락시장 방문 관련, - <KBS/SBS>는 대통령이 체감경기 어려움을 절감하는 표정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 <MBC>는 상인들의 기대감과 냉소가 교차했다고 보도 (기자,“...모두의 마음 채우기에 더 많은 시간 필요...”)
12.5	(미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 ‘부처업무보고 이달부터 시작’ 관련, - <SBS>는 경기활성화 의지 표명으로 해석하고 상보 - <MBC>는 미보도 (<KBS>는 청와대 계획 팩트만 전달)
12.6	‘성향보고서’ 파문 (12번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는 단신보도, <SBS> fact위주로 보도한 반면 - MBC는 대통령 형임을 강조하며 ‘상왕정치’ 논란 제기
12.8	재산기부 또 논란 (17번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재산환원 논란 관련, - <KBS>는 “재산환원 곧 발표” 제목으로 청와대 입장과 기부방식·효과에 보도초점, <SBS>는 논란 자체도 미보도 - <MBC>는 ‘불신’ 시각 가진 시민 인터뷰와 전문가 지적에 보도비중을 상당량 할애하는 등 비판적 시각에서 보도
12.8	‘4.19혁명’이 데모? (19번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부의 건국60주년 기념 영상물 논란 관련, -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업적인 청계천 복원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높게 평가됐다며 관련 내용 부각 조명 (<KBS> 단신, <SBS> 상기 내용은 보도하지 않음)
12.10	‘측근 봐주기’ 논란 (19번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운재 전 서울시 부시장 건축위 민간위원 위촉 관련, - <KBS>는 논란 자체와 청와대 해명만 단순보도(단신) - <MBC>는 부적절하다고 논평하고 ‘측근봐주기’ 의혹 제기
경제 관련		
12.1	앵커클로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부터 오바마 조정능력 시험대...우리 경제팀은 이미 초라한 성적표...제2의 미네르바 · 이헌재 전 부총리 등 강호재현 선생님들 모두 나왔다”
12.4	정부 구조조정 계획 ‘오락가락’ (15번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구조조정 말만 하고 내부 입장을 정하지 못해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
12.5	앵커클로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련의 강만수 장관 발언 논란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엮어, ‘고쳐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것’의 사례로 지목

言論界 쇄신 진 행동향 및 고려사항

2008. 8. 5

監査院의 '해임' 의결(8.5)과 檢察의 「PD수첩」 기소 임박 등 言論界 쇄신이 可視圈에 접어들고 있으나, 막판 저항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

□ 社別 진 행동향

M B C ⇒ 法院 등의 '왜곡보도' 확인에도 불구하고, 저항태세 여전

- 서울중앙지검의 「PD수첩」 중간 수사결과 발표(7.29)와 서울남부지법의 농식품부 일부승소 판결(7.31)로 '왜곡보도'가 명확해졌음에도
 - 시사교양국 PD들은 사측에 抗訴주장은 물론, 檢察의 해명자료 제출(8.13限) 요구에도 불응키로 하는 등 '抗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영진은 명확한 입장정리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
- 과 ' '는 8.4 「PD수첩」 상대 100億원 損賠訴를 제기하겠다는 청구인단 1萬명(1인당 100萬원) 모집계획을 발표

○ 放通委는 8.6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7日이내 방송) 확정 방침

□ 評價 및 고려사항

言論界 쇄신작업에 대한 과 진보권의 반발은 불법시위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감·북경올림픽 등으로 지속 쟁점화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8월중 마무리한다』는 원칙아래 총력 대응 필요

①

② MBC는 에게 '공개 사과'·관계자 문책 등 분명한 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제작진 사법처리 확행

③

④ 은 정부광고 대행업무 민간개방·프레스센터 임대관리권 회수 등 단계적 압박수위 제고로 퇴진투쟁 點火

※ 추가 배포 : 민정수석, 홍보기획관, 대변인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09. 12. 24 ()

일부 **좌편향** PD와 진행자들이 라디오 시사프로를 통해 4대강·세종시 등 국정현안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

1 社別 보도실태

▶ MBC : 를 중심으로 **左派** 편들기 지속

○ 「 의 시선집중」은 안팎의 지탄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左派** 논리에 경도된 편파보도로 정부시책 **흠집내기**에 경사

- **예결위 파행**의 책임을 **4대강 예산**에 떠넘기고 의 **4대강 중단 소송**을 정당화하는 등 노골적인 **비판**보도로 **출근길 민심 호도**

* 등 **비판성향 인물**
들을 집중 섭외, **좌파세력**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

- 특히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비판**(12.9)·**고교선택제 준비미흡** (12.14) 보도를 통해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이 없다고 왜곡**

○ 「 의 시사터치」도 **좌편향 PD·출연자들이** **反정부 비판**보도에 **가세**

- 등
좌파인물들이 고정 출연자로,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매도**

- 특히 와 는 '**골수좌파**'로, 「**시선집중**」週末 방송과 「**시사터치**」를 동시에 맡아 **좌편향 보도 주도**

○ 「 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는 12.18 “**세종시·4대강 때문에 용산사태를 잊어버렸다**”는 등 **악의적 멘트**로 여론 선동





2 구조적 문제점

- 라디오 제작국은 '기피부서'로, 극렬 노조원 등 문제직원이 대부분
 - 라디오 PD들은 물의를 일으켜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 오히려 '영전'으로 치부, 편파방송을 해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
 - 좌편향 진행자와 PD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보도방향을 설정하고, 꺾맞추기식으로 비판성향 출연자·고정패널을 섭외, 왜곡보도 악순환
 - 청취율 제고와 광고유치를 노린 '관심끌기' 차원의 비판보도 관행화
 - 초청취자인 서민층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심리를 이용, 무조건 정부 비판보도가 청취율 제고의 관건이라는 기획의도가 한몫
 -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라디오방송 특성상
사고 등 제작진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
 - 放送審議委員도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한 감독으로 왜곡보도에 一助
 - TV에 비해 매체영향력이 낮다는 이유로 범정제재(시청자 사과, 경고, 주의) 대신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 조치가 다반사
 - 모니터링 요원(398명) 대다수가 전문성이 없는 40-50대 가정주부로 구성, 교묘한 편파·왜곡보도를 잡아내기는 한계가 있고 그나마도 TV 모니터링에 집중해 라디오는 심의 사각지대로 방치
- * 08년 방송심의실 모니터링 요원 1명당 평균 보고건수가 0.3건에 불과

3 평가 및 고려사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비판보도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放送社 차원의 自淨 노력과 함께, 행정제재 및 왜곡보도 대응활동 강화

- ① · MBC · 경영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발적 시정 촉구
 - 등左편향 진행자 퇴출 및 고정출연자 교체 권고
 - 가시적 성과 미흡시 봄철 프로개편을 계기로 문제프로 폐지·포맷 변경으로 편파방송 악용소지 근절
- ② 放通審議委는 라디오 시사프로에 대한 내실있는 심의·제재에 만전
 - 모니터링 역량 배가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시민 신고코너를 신설,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시로 청취자들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
 - 라디오 시사프로 모니터 교육 강화 및 전담 모니터링 요원 확충
 -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TV프로와 형평성을 맞춰 법정제재 확행
- ③ 각 부처는 라디오 시사프로를 철저히 모니터, 정부시책 왜곡보도시 反論權 행사는 물론, 명예훼손 손배소 등 법적대응으로 경각심 환기
- ④ 등 건전단체·보수언론 주도로 문제 프로그램의 편파보도 문제제기 등 라디오 시사프로의 편파보도 실태 공론화

※ 붙임 : 라디오 시사프로 현황

※ 배포 : 홍보수석

< 붙임 >

라디오 시사프로 현황

(09. 12. 23 기준)

매체	일시	프로그램명	진행자	PD
----	----	-------	-----	----

MBC	06:15-08:00(월-토)	의 시선집중		
	18:05-20:00(월-금)	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주말)	18:05-20:00(토·일)	의 뉴스터치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10. 1. 13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방송사가 선거기획단 구성 등 선거방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활동 강화 필요

1 방송사별 선거기획단 실태

▶ MBC →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편파보도 우려**

○ **등 좌편향 인물 주도로 09.12.14 출범**

* 현재 평기자 3명()을 포함 총 5명으로 편제, 2월중 20명으로 확충

○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월부터 본격적인 **왜곡·비판보도 양산 전망**

* 선거기획단에서 고생하면 해외 특파원 및 원하는 부서로 이동시켜 주겠다고 유혹

- 최근 경찰·방통심의위에서 선거기획단 인적구성을 조사하자 「PD 수첩」을 통한 폭로 협박 등 정부의 '선거개입' 시비 제기도 우려



2 문제점

▶ 방송사 → 취재력 보강에만 급급, 공정성 감시는 뒷전

○ 社内 심의기구인 사전심의보다 형식적인 사후심의를 치중, 자율적으로 제정한 '선거보도준칙'도 제재조항이 없어 면피용에 불과

○ 특히 선거판세를 좌우하는 여론조사 문항 및 설문방식을 자의적으로 결정, 불법·과열선거 조장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개선노력 별무

* 선관위는 지난 5·31 지방선거 제재 사례중 非객관적인 여론조사가 34%에 달한다고 지적

▶ 선거방송심의위 → 左편향 人的구성과 낮은 처벌수위로 왜곡보도 악순환

○ 방통심의위 산하 법정기구인 '선거방송심의위'에서 선거보도 감시를 전담

* 선거법 제8조 ②항: 방통심의위는 선거 120일 前부터 선거이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를 운영

- 위원장을 포함 9명의 심의위원을 與野 6:3 비율로 추천, 2.2부터 선거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 및 제재업무를 수행할 예정

- 측이 인선과정에서 정치적 성향과 '전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으로, 左派인물 참여로 인한 파행운영 및 공정성 훼손 우려

○ 특히, 편파방송에 대한 법정제재 기피 관행으로 실질적 견제역할 미흡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정보도 등 법정제재는 거의 없고 경고·주의·권고 등 가벼운 행정제재가 90% 이상 차지

* 18代 總選: 17건(주의 8·권고 8·반론보도 1), 17代 大選: 32건(경고 2·주의 14·권고 16)

- 일부 左편향 제작진들은 선거관련 誤報시 '숨방망이' 징계에다 선거가 끝난후 처벌 가능성도 낮다며 편파보도를 부추기는 등 악순환 지속

* 지난 17代 大選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선거보도 154건중 98건(64%)이 보도

3 평가 및 고려사항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혼탁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환기** 및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강구로 **건전보도** 유도

①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 **좌편향** 제작진 배제 및 자체 모니터링 강화

- **극렬노조원** 등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거나, 선거보도 관련 **심의위**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제작진 배제를 설득
- **社内**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社別** '선거보도준칙'에 관계자 문책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조항** 삽입

②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시 **좌편향** 시민단체 및 특정 방송사 관련자 배제

- 심의위원 위촉권한이 있는 **방통위원장**이 **좌편향단체·특정 방송사** 관련자 등은 심의 **공정성** 침해 가능성을 **결격사유**로 제시
- 지방선거임을 고려, **지역방송 모니터링** 요원(현재 150명) 대폭 증원
- **중장기적**으로 선거보도 심의 전문성 강화 및 지나친 경징계 관행 시정을 위해 방통심의위 산하에서 **선관위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 고려

* 18代 總選 보도 제재 실적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선관위 직속) 111건, 선거방송심의위 17건

③ 등 **건전매체** 및 등 **보수단체**들과 협조, 방송사의 **좌편향** 선거보도 **견제활동** 강화 및 **자생적** 선거보도 **감시단체** 조직화

※ 배 포 :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